



해병대장병 7000명이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다. 사진은 15일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선 해병대 장병들이 1t트럭에서 모판을 내리는 모습. /뉴스시스

광주시,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시설 50기 확충

KS규격 적용 표준형 충전방식 도입... 이용 편의성 대폭 향상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말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50기를 설치, 운영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공모해 LG에너지솔루션(구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충전시설 17기를 우선 설치해 지난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보조사업자인 LG에너지솔루션(구루)은 환경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해 충전시설 20기를 추가로 구축했으며, 연말까지 13기를 확충해 광주지역에 총 50기의 충전시설이 갖출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특정 제조사에 한정된 기준방식과 달리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을 적용한 표준형 충전시설로, 향후 출시되는 표준형 전기이륜차와 호환이 가능하다.

배터리 교환은 일반자전거처럼 간단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용자는 방전전 배터리를 분리해 충전시설에 넣고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하면 되며, 소요 시간은 30초 이내로 빠르다.

광주시는 이번 충전시설 확충으로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주춧대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줄이고,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13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농업인 등 취약계층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의 20%를, 배달용 차량의 경우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단 취약계층과 배달용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나병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산업표준형 충전시설 도입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기이륜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디젤 화물차 단종' 농촌 곡소리... LPG·전기차 있는데, 왜?

"은 동네가 화물차 때문에 난리야 난리."

전남 무안군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58)씨는 10년 넘게 탄 1t 화물차를 교체하려고 하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디젤 화물차가 단종되면서 액화석유가스(LPG)와 전기차 모델만 남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밭이나 논두렁 같은 험한 길을 다녀야 하고 농산물이나 농기계처럼 무거운 짐도 실어야 한다"며 "LPG나 전기차는 디젤에 비해 힘이 약하다. 시골은 충전소도 부족하고 멀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 디젤 화물차를 구하려 해도 매물이 거의 없고 간혹 있어도 신차보다 비싸다"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단종되기 전에 하나 더 사들 걸 그랬다"고 하소연했다.

디젤 1t 화물차 생산이 중단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전남 농민들의 불편이 점차 커지고 있다. LPG와 전기 화물차는 충전 인

LPG·전기차 출력 부족 "밭길 시동 꺼지기 일쑤"

시골 마을 충전시설 태부족... 주행 거리도 짧아

중고차 값 신차 추월... 농민들 "농촌 불편 천지"

프리가 부족한 농촌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출력이 낮아 농업 현장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 따르면 현재 생산 중인 1t 화물차 봉고3는 LPG와 전기차 모델만 판매되고 있다. 현대차 포터 역시 2023년 11월 디젤 모델 생산을 중단했다.

농업 현장에서 화물차는 필수 장비다. 농산물 수확을 위해 밭에 진입하거나 언덕 길을 오가는 일이 많아 대부분 사륜구동 차량을 쓴다. LPG 모델에도 사륜구동이 있지만 디젤보다 기어 변속이 예민하고 밭길 주행 시 시동이 꺼지는 사례가 잦다.

전기차는 주행거리 제약이 크다. 봉고3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17km지만

겨울철 히터를 켜거나 무거운 짐을 실으면 실제 주행거리는 훨씬 줄어든다.

LPG나 전기차의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들에게는 큰 이점이 되지 않는다.

장성군에서 농사를 짓는 박모(68)씨는 "농번기에는 하루 종일 차를 몰아야 하는데 몇시간씩 충전할 여유가 없다"며 "충전소도 집이나 밭에서 멀고 농촌에서 화물차 없이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디젤 단종 이후 불편이 크다"고 토로했다.

디젤 화물차의 신차 공급이 끊기면서 중고차 시장의 몸값도 크게 올랐다.

광주의 한 중고차 매매상 관계자는 "1t 화물차 신차가 약 2000만원인데 출시 2-3년 된 디젤 중고차는 오히려 신차보다 비싸게 거래된다"며 "수요가 많아 매물 자체가 귀하다. 언젠가는 LPG 모델로 수요가 옮겨가겠지만 지금은 중고 디젤이 훨씬 인기"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지면 안내

- ▶ 화재에 멈추고 해킹에 털리고... 정부전산망, 또 드러난 관리 부실 3면
- ▶ 노동장관, 외국인노동자 작업복 겨울옷 나눔행사 참석 9면

광주서도 '위법 계엄 따른 시민 고통' 손배소... 21일 첫 변론

광주시민 23명,尹 전 대통령에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 청구

광주에서도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이 열린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법 민사25 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광주 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별관 108호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시작되는 첫 변론기일은 영상 재판으로 진행된다.

원고 측 광주시민 23명은 광주여성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12·3 비상계엄 보름여 만에 당시 현직이었던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위자료 23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에 나섰다. 원고 측 변론은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 유한별 변호사가 무료로 맡는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소장 부분은 지난해 말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가 올해 2월13일 도달했다. 최근에야 윤 전 대통령 측도 소송 대리인을 선임, 변론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 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실제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시민들이 입은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의 1심 선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즉 불복해 항소했다. /이승원 기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솔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